

정책 동향 2호(11/6~11/12) 2017년 11월 13일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 주요 동향 >

- ▷ 시진핑 주석 1인 집권체제 강화 이후, 중국의 수요가 확대되는 일대일로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와 로드맵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주목함. 북한 내 수감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영사 접견권 관련 보고서,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각국의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분석 자료 참조.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이전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제도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도 참조할만함.
- ▷ 한미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계기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최대 압박을 할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군사옵션을 여전히 열어둔 점, 한미FTA와 관련 개정협상이 아닌 재협상(renegotiate) 표현을 사용한 점이 향후 주목할 지점임. 정부는 ‘균형외교’를 주장했다가 미-중 간 균형외교가 아니라고 부인함으로써 신뢰위기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정책네트워크내일의 공식입장이 아닌 회원님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이므로 인용·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	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3
통일연구원	통일	201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과 영사접견권	4
현대경제연구원	통일	남북관계 전문가 통일의식 설문조사	5
입법조사처	경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6
입법조사처	고용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6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주한미국대사관	외교 안보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7
주한미국대사관, 청 와대,	외교 안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발언	8
청와대	외교 안보	한-중 정상회담	9
조선중앙통신	통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전문)	10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 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승신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11.6.)

<요약>

- 1)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은 7% 내외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입지를 유지하였으나 민간경제 활성화, 생산과 분배 구조 개선, 통상분쟁, 대중국 신뢰성 문제 등 대내외적 과제를 안고 있음.
- 2)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운영 방향 관련 주요 이슈로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혁신형 국가 건설, 지역균형발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 등이 제시됨. 특히, ‘기술혁신’과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되었으며, ‘일대일로’를 당장에 삽입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대내외 경제협력의 중점이 될 것임을 강조
- 3) 향후 5년간 중국은 경제의 양적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과잉설비 제거, 신산업 발전,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추진 강도를 높이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경제 구조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전망이다.
- 4)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1인 집권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시 주석이 주창해온 공급측 구조개혁·일대일로·지역개발전략·자유무역시범구 시행 확산 등의 국가전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한국은 중국의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사업기회에 주목할 필요... 즉,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 구상 및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 필요

<역대 당대회의 핵심 이슈와 경제 전략>

당 대회	시기 / 대표인물	핵심이슈	주요 경제 전략	배경 사건 및 정책
12	1982.09/덩샤오핑, 우야오방	사회주의 경제 건설	자원 집중을 통한 경제 건설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 유지 자력갱생과 대외기술 습득의 동시 추진	1987년 11기 3중전회 개방개혁 선언 1980년 경제특구 설립
13	1987.10/덩샤오핑, 자오즈양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정책	경제체제 개혁 기술진보와 노동 효율 제고를 통한경제 발전 사회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의 균형 대외개방 확대	1984년 연안도시 개방 1988년 기업법(정부와 기업의 분리)
14	1992.10/장쩌민, 주룽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 가속화 대외개방 지속적 확대 지역경제 발전 촉진 특구전략 수립	1988년 물가폭동 1989년 천안문사태 1990년 주식시장 설립 1992년 남순강화
15	1997.09/장쩌민, 주룽지	덩샤오핑 이론 확립	소유제도 개혁 국유기업개혁 시장메커니즘 활성화 거시경제 조절시스템 구축	1993년 곡물가격 자유화 1993년 회사법(근대적 기업제도) 1994년 分税制(중앙의 징수권 강화) 1996년 경상항목 자유태환
16	2002.11/후진타오, 원자바오	3개 대표론, 샤오강 사회 건설, 사회주의현대화	산업 업그레이드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농촌경제 진흥 및 도시화 촉진 서부대개발 국유자산관리 체제 개혁	1999년 국유은행 부실채권 정리 2000년 해외진출전략(走出去) 2001년 WTO가입
17	2007.10/후진타오, 원자바오	과학적 발전관, 전면적 샤오강 사회 건설	자주창신 능력제고 경제 발전 방식 전환 산업 업그레이드, 도농 통합 발전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정책 역내 경제권 형성 금융개혁	2004년 국유은행 주식제 개혁 2005년 비유통주 개혁 2006년 농업세 폐지 2007년 물권법(개인재산보호)
18	2012.11/시진핑, 리커창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과학적 발전관	민생안정을 위한 GDP와 주민소득 동반성장 경제 발전 방식 전환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정책	2008년 신노동법(노동자 보호) 2008년 신소득세법(외자혜택 철폐) 2009년 위안화국제화 추진

		샤오강 사회 완성	서비스형 정부 신(新)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 농민공의 점진적 시민화 균형무역달성 외자이용의 효율성 제고	2009년 경기부양 2010년 7대 전략산업 발표 2011년 부동산세 시범 도입
19	2017.10/ 시진핑, 리커창	신(新)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공급측 개혁 혁신형 국가건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대외개방 확대 지역균형 발전 금융체제 개혁 심화	2013년 일대일로 2014년 후강통 시행 2014년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 2015년 공급측 개혁 최초 정식 발의 2015년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2016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 2016년 외자삼법(外資三法) 수정 2016년 선강통 시행 2017년 채권통 시행

자료: 양평섭, 최필수, 이효진(2012), 「중국 신(新)지도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2-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新华网, “党的十八大以来大事记,”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원문 읽기> <https://goo.gl/WKNUAK>

시사점

1) 시진핑 주석이 1인 집권체제 강화 이후, 경제정책은 양적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을 전망함. 한국은 중국의 수요가 확대되는 일대일로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 구상 및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 주목함.

201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과 영사접견권 (이규창, 통일연구원, 2017.11.8.)

<요약>

- 1) 유엔 총회의 2017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1월 14일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12월 20일을 전후하여 유엔 총회...본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2017년 결의안에서 주목되는 내용...기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들은 북한 주민과 해외 탈북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내의 외국인 문제...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보호 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내 외국인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3) 영사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이 1963년 채택되어 1976년 효력을 발생...북한은 영사협약에 1984년 8월 8일 가입...국제사법재판소(ICJ)는...영사협약이 영사관계에 관한 기존의 국제 관습법규를 성문화한 조약이라고 판시...영사협약 제36조는...영사접견권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자국민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기도 하다....ICJ는 2001년 LaGrand 사건을 판결하면서 영사접견권이 국가의 권리인 동시에 개인의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 4)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들과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에게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한 반면 남한 국적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에게는 영사접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케네스 배 이후 영사접견이 장기간 차단되는 등 외국인들의 영사접견권 실현이 장애를 받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김동철 외에 미국 국적의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이 억류되어 있으며, 남한 국적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6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
- 5) 북한은 영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또한 국제관습법인 영사접견권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

의 의무가 있다...남한 주민들에게도 영사접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의 영사보호 대상에 남한 주민을 명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정식 채택될 경우 북한이 영사접견권의 대상은 외국인이며 남한 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억측을 부릴 가능성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원문 읽기> <https://goo.gl/fNSynu>

시사점

- 1) 인권의 한 범주로서 북한 내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접견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도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논지임.
- 2) 자유권 침해에 관해서는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권 분야별 맞춤형 대응으로 인권 개선을 주도하고, 다양한 남북 인권 대화를 통한 인권 문제의 실효적 개선을 유도해야 할것임.

■ 남북관계 전문가 통일의식 설문조사 (이용화-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7.11.8.)

<요약>

- 1) 현대경제연구원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 간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 2) 전문가들은 전년도에 이어 ‘완전한 통일(35.7%)’보다는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37.8%)’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전문가들의 상당수(72.4%)는 통일이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 3명 중 2명(75.5%) 이상은 통일세 신설에 찬성했다.
- 3) (통일에 대한 주변국 영향력) 2016년 조사에 비해 미국(2016. 7 57.8% → 2017.10 50.0%)의 통일 영향력에 대한 비중은 축소된 반면, 러시아(동 기간 5.5% → 15.3%)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반수 이상(51.0%)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국가별 통일 호감도 >

구분		2012.10	2013.11	2015.7	2016.7	2017.10 (%)
가장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나라	미국	68.2	56.2	49.5	57.8	50.0
	중국	18.8	38.5	42.5	36.7	33.7
	일본	1.4	0.0	0.0	0.0	1.0
	러시아	11.6	5.3	8.0	5.5	15.3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나라	미국	11.3	28.0	25.3	23.3	23.5
	중국	69.0	55.0	44.8	51.1	51.0
	일본	19.7	17.0	27.6	25.6	25.5
	러시아	0.0	0.0	2.3	0.0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2.10, 2013.11, 2015.7, 2016.7, 2017.10.

<원문 읽기> <https://goo.gl/gKWq52>

시사점

- 1) 전년도와 비교하여 표본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를 살펴보면, 통일호감도에 있어 미국은 57.8% →50.0%로, 러시아는 5.5% →15.3%로 상승한 부분이 변화라고 생각되며, 전문가들의 판단의 흐름으로써 참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기준하, 입법조사처, 2017.11.10.)

<요약>

- 1) 2017년 9월 28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 개정법률은...회사의 책임과 관련, 첫째,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의 대상을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둘째,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가 법정기한 내에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대표이사가 직접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하여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3)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 관련, 첫째,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감사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
- 4) 감독규정으로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해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회계부정을 저지른 회계 담당자, 감사인 등에 대하여...벌칙을 상향조정하였고,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시효를 연장(3→8년)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

<원문 읽기> <https://goo.gl/g4kaL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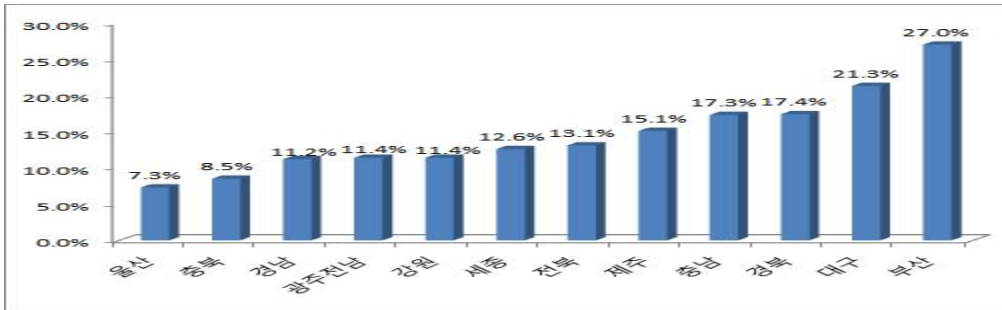
[시사점]

- 1) “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받았던 낮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향후 감사인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금융감독당국은...공정한 태도로 회계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라는 필자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재환, 입법조사처, 2017.11.6.)

<요약>

- 1)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Policy)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도입된 제도
- 2)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으로 이전하는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살펴보면...지속적으로 증가...그러나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충북, 울산 등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3) 제도의 의무화에...찬성하는 의견은 지역인재의 지속적인 역외 유출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지방대학 위기 해소에 기여...반대하는 의견은...수도권지역 대학 출신 또는 타 지역 대학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야기...입사시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현행 채용 제도에 비하여 합격자의 질 저하로 업무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 등

4) 향후 발전방안으로는...혁신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역차별 문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전공공기관은 단순히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맞추는데 급급하기 보다 해당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역차별, 능률성 저하 등 의무화를 반대하는 논거들도 나름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견(異見)도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YLxPqt>

시사점

1)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별 인재 채용의 편차가 큰 점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필자의 주장처럼 역차별 논란 등에도 경청할 필요성.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주한 미국 대사관, 2017.11.8.)

<요약>

1) 우리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텄고...우리 양국군은 험준한 산을 묵묵히 전진했고...때로는 후퇴하면서도 이들은 북진했고 선을 형성했습니다. 그 선이 오늘날 탄압받는 자들과 자유로운 자들을 가르는 선이 되었습니다...한 평생이라는 시간보다 짧은 기간에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2) 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던 곳, 이곳으로부터 24마일까지에만 미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5세 미만 영유아 중 거의 30퍼센트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립니다...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지속적인 고문, 기아, 강간, 살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1950년 한국전쟁 시작시 남북한의 1인당 GDP는 거의 동일했습니다...오늘날 한국 경제는 북한 대비 40배 이상입니다.

3) 북한정권은 미국과 동맹국에 했던 모든 보장, 합의, 약속을 여기면서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했습니다...플루토늄을 동결하겠다고 94년에 약속한 이후에도 북한은 합의의 혜택은 거두면서 즉각적으로 불법적 핵 활동도 지속했습니다...2005년에는 수년간의 외교이후, 독재체제는 궁극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궁극적으로 폐기하고 비확산조약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겠다고 협상한 무기를 실험했습니다.

4) 북한에 말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입니다...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항상 강해야 합니다. 세계는 핵 참화로 협박하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책임있는 국가들은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정권을 고립시켜야 합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며 모든 무역, 기술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5) 나는 북한 독재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어 한반도에 왔습니다...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입니다...우리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경우에만 이 같은 밝은 길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mSDmFS>

■ 시사점

1) 전쟁을 암시하는 공격적 표현 없지만, 부시의 '악의축' 발언처럼 '잔혹한 정권' '독재' '광신적 종교집단'이라 규정하면서, 단합된 제재를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를 압박함.

2) 한편, "23차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것이고 훌륭하게 해낼 것...행운을 빕니다."라고 연설하여,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긴장 수위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발언 (주한미국대사관, 청와대, 2017.11.7.)

<요약>

1) 문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2)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

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 저는 양국이 이미 5년이나 경과한 현행 무역 협정을 재협상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I feel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reach a free, fair, and reciprocal trade deal as we **renegotiate** our current five-year-old trade document)...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전체의 평화와 안보라는 관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막강한 군사적 능력을 전면 투입하여 자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신속하게 협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지시한 문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주문할 예정이며...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을 의미합니다. 대한국 무역 적자 폭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주문할 예정이며 미국은 이미 일부 주문을 승인했습니다. 됐나요? 감사합니다.

6) **문재인 대통령:** (통역) 우선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우리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국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아세안, 러시아, 또 EU, 이런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서 보다 균형있는 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야기는 지금은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국면이 전환되면 그 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것입니다.

<원문 읽기> <미대사관> <https://goo.gl/r6umYU> <청와대> <https://goo.gl/qr6vdQ>

시사점

- 1)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막강한 군사적 능력을 전면 투입하여 자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태세”라고 평화적 방법으로 최대의 압박을 하지만, 필요할 경우 군사옵션을 여전히 열어둠.
- 2) 한미FTA의 폐기도 아니고 개정협상도 아닌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도입과 관련하여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또한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주장했다가 다시 부인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다른 신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한-중 정상회담 (청와대, 2017.11.11.)

<요약>

1) 양 정상은...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 양국 정상은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2) 양 정상은 또 사드 문제와 관련 10월31일 공개한 ‘양국 관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이와관련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시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읽기> <https://goo.gl/Z9UzbX>

시사점

1) “미중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북한이 무모하고 위협한 힘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키우는 데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함축된 것처럼, 미중은 일단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것이며, 한중 또한 재확인이라 할 수 있음.

2) 한중 정상이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을 언급한만큼 한중관계 정상화도 가시화되고, 평창올림픽까지는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전문) (조선중앙통신, 2017.11.11.)

<요약>

1) 트럼프가 지난 9월 유엔총회마당에서 우리 공화국의 절멸이라는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거부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국가를 《악마화》하여 우리 정부와 인민을 갈라놓고 조선과 국제사회를 대치시켜보려고 꾀한 것이다.

2) 트럼프가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요,미국은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떠들어댔는데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키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립장이다...우리가 핵을 보유한것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과 대조선적대시책동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하고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이다.

3)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트럼프와 같은 늑다리미치광이의 망발은 결코 우리를 놀래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하며 반대로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다는것을 확인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 건설대업 완성에로 더 빨리 질주해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n4tLVq>

시사점

1) 북미 간 물밑 접촉 과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핵 보유는 “자위적 선택”이며 “병진노선” 견지, 핵을 통한 “힘의 균형”이라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임. <끝>